

#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EU 해운업종 금융불안으로 유럽은행의 부실 위험 증가  
European banks expect rises in loan defaults by EU shipbuilding industry
- EU이사회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과 집행위원 교체  
EU chooses its European Council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representative
- 한-EU FTA를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  
Korea must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ws prior to conclusion of Korea-EU FTA
-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EU 낙농업  
Rising competition in global dairy market threatens EU dairy farmers
- 리스본조약 발효가 한-EU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doption of Lisbon Treaty on Korea-EU FTA ratification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Economy</b> EU 해운업궂 금융불안으로 유럽은행의 부실 위험 증가 ..... 002 European banks expect rises in loan defaults by EU shipbuilding industry
	<b>EU Politics</b> EU이사회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과 집행위원 교체 ..... 005 EU chooses its European Council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representative
	<b>Trade Issues</b> 한-EU FTA를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 ..... 009 Korea must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ws prior to conclusion of Korea-EU FTA
	<b>Industry Trends</b>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EU 낙농업 ..... 013 Rising competition in global dairy market threatens EU dairy farmers
	<b>EU Law</b> 리스본조약 발효가 한-EU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 ..... 017 Effects of adoption of Lisbon Treaty on Korea-EU FTA ratification
	<b>Social Issues</b> EU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 020 Fair trade and ethical consumerism in EU
	<b>Report Review</b>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EU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 ..... 024 EU corporations' R&D investment still growing fast
	<b>EU Centre news</b> 제3회 국회 브뤼셀 포럼 ..... 027 The 3 <sup>rd</sup> Brussels Forum 제4회 EU Core Circle 세미나 개최 ..... 028 The 4 <sup>th</sup> EU Core Circle Seminar

# EU 해운업發 금융불안으로 유럽은행의 부실 위험 증가

## European banks expect rises in loan defaults by EU shipbuilding industry

The EU shipbuilding industry is an important and strategic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earns valuable foreign exchanges. European marine insurance corporations are the leaders in the global insurance market and this was possible because European shipbuilding companies and ship owners used its regional financial firms to insure their assets against unknown risks. With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volume of goods being shipped has declined, the liquidity has been tightened and the risks of defaults have risen. These factors are threatening European banks which have already been suffering since the 2007 sub-prime mortgage crisis.

### EU 해운산업의 중요성

해운산업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외화가득산업이다. 또한 조선, 금융, 항만 및 해상보험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연계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일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후 고용유발산업으로서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연관효과가 지대하다.

EU 해운산업은 조선과 항만건설을 촉진시켜 유럽 무역항들이 세계 제일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외항해운업체 소속선박에 대한 선체보험 등을 역내 손해보험사에 부보하여 유럽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그리고 선박 건조 및 중고선 도입 시 선박금융을 일으켜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해안국이며, 7개국의 수도가 해안에 위치해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해운업 종사 인구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오늘날 약 7,000만 명에 달한다(이는 EU 25개국 전체 인구의 약 16%). 그리고 EU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해안으로 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살고 있다.

EU는 1,000여 개가 넘는 항구를 갖고 있으며, 연평균 3억 명 정도가 해운 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EU 수출입 화물은 물론 원유, 철광석, 연료탄, LNG 등 전략물자들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다.

2003년 기준 유럽에서 가장 바쁜 항구는 로테르담, 안트워프, 함부르크, 마르세이유, 르아브르, 암스테르담, 알헤시라스, 제노아, 런던 등의 순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EU 27개국의 경제 성장이 2007년 2.9%에서 2008년 0.8%, 2009년 -4.1%로 예상되지만, EU의 해운업은 수용능력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운송선의 총용적톤수가 6.9% 증가할 때 유럽은 6.7%까지 증가하였고, EU의 점유율은 약 21.6%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세계 운송의 약 45.5%를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아시아가 34.7%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세계 해운사 상위 20개 기업에서도 유럽계 기업이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35.8%를 차지한 아시아를 상회하여 당당히 1위의 자리를 지켰다.

### 글로벌 경기침체로 EU 해운업계가 타격

해운업 및 조선업 경기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및 세계경기 호황 등으로 2003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2008년 말 건화물선 운임지수인 발틱운임지수(BDI)가 800을 하회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조선 및 해운업 경기가 큰 폭의 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래 5년간 상승세를 지속해온 해운업계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는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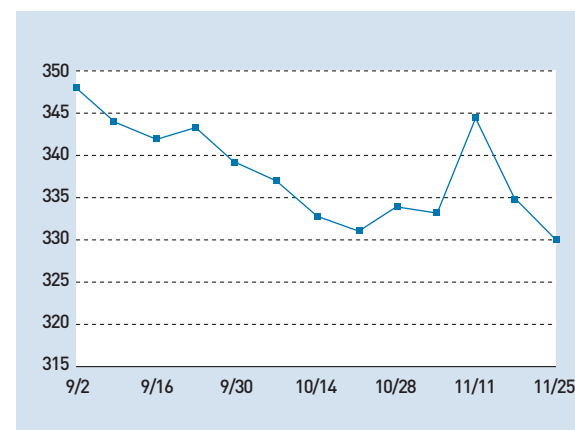
### ★ 발틱운임지수(BDI)<sup>1</sup>와 BPI<sup>2</sup>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세계 정기선 시황도 급락하였는데, 2008년 9월까지만 해도 1000포인트 이상 수준을 유지하던 컨테이너선 종합용선료지수인 HR(Howe Robinson)지수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바닥세를 시현하였다. 10월 들어 다소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상승세가

### ★ HR(Howe Robinson) 컨테이너 지수 추이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

<sup>1</sup> 발틱해운거래소가 1985년부터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사용해온 Baltic Freight Index(BFI)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 선형(소·중·대)에 따라 Baltic Capesize Index(BCI), Baltic Panamax Index(BPI), Baltic Handy Index(BHI) 등 별도의 지수로 구성.

<sup>2</sup> BPI는 중형벌크선의 운임지수로 벌크선의 수요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크다.

미미해 11월 11일 이전까지 330~335포인트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다. 11월 11일에 급상승을 기록하였지만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또다시 330포인트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 EU 해운업계의 불황 요인

EU 해운업계의 불황 요인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전 세계 경기침체로 글로벌 무역이 25% 감소하면서 유럽 해운업체들은 선박임대료 폭락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WTO의 최근 경제 분석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세계교역량은 1/4분기 대비 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33% 감소하였다.

둘째, 운임이 급락하여 운항을 중단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상태 및 신용이 양호한 몇몇 선사에 발주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결과 발주가 줄어든 선사의 운임이 하락하고, 이는 용선선박의 운항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선박의 매수 수요가 없어 선가가 급락하고 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도 매매가 어려운 상태이며, 선사와 조선소의 자구노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용선료, 선가원리금, 신조중도금 등 거래대금의 결제가 지연됨에 따라 해운, 조선, 선박금융 부문이 동반 부실화되고 있다. 특히 용선료, 중고선가, 신조선가의 하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져 각종 선박거래계약이 파기되면서 이것이 외환파생상품과 연계되어 부실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다섯째, 2008년 하반기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EU 경제에 해운 시황 악화는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1월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EU 해운업체에게 또 다른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가시지 않는 현 시점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EU 해운업계의 불황은 또 다른 금융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유럽은행의 손실 부담이 가중

유럽 해운업계의 불황은 유럽은행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해운업 침체로 선사가 대출받은 선박건조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은행들이 선박을 가압류해 은행의 대형 선박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유럽은행들의 부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유럽은행들은 현 부실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부분적 은행대출로 건조 중인 선박을 강제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가치가 크게 하락해 유럽은행의 부실자산 규모가 자연히 확대되어 은행의 위험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지난 2007년, 선박업체들이 향후 해운업 호황을 노리고 주문했던 선박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시점에는 선박 가압류 사태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유럽은행들은 해운업체 채권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유럽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운업체 채권은 3,5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해운업체에 대한 채무 비중이 높은 영국 RBS와 로이즈뱅크그룹, 독일 HSH-노르트뱅크(메이저 선박금융 은행), 코메르츠뱅크 등의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두바이 사태는 해운 시장에 단기적 악영향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난 26일 이후 발틱운임지수가 2009년 11월 30일 3,887까지 밀려났다. 특히 두바이쇼크로 금융시장이 출렁했던 2009년 11월 27일에는 발틱운임지수가 145포인트, 3.52%나 떨어졌다. 지난 9월 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손익분기점인 3,500포인트를 훌쩍 뛰어 넘어 2009년 11월 19일 4,661포인트를 찍은 이후 10일 만에 약 20%가 급락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틱운임지수가 하락한 이유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세와 두바이 사태로 인한 유럽은행들

의 충격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시중 증권사들은 2009년 11월 말 중국 철광석 재고가 다시 증가한데다 미국 철강사들의 가동률도 조정을 받아 발틱운임지수가 조정세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다. 2,100을 갓 넘었던 2009년 9월 말부터 한 달여 만에 두 배가 된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000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던 시황이 단숨에 4,0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신용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충격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두바이에 대규모 투자를 해 온 유럽은행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단기적으로 선박금융이 위축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유럽은행들은 크레디트스위스, HSBC홀딩스, 스탠더드차타드, 바클레이즈, 로이즈뱅크그룹,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다. 2009년 11월 27일 RBS의 발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가장 많은 대출과 잔금이 남아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은행들이 2009년 6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은행들에게 빌려준 자금 규모는 총 873억 달러이며, 이 중 495억 달러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선사들이 이번 두바이 사태로 필요한 선박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운업계는 또 다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여러 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바이 사태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발틱운임지수의 하락은 단기 하락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운송하는 석탄 및 철광석 등 전 세계 물동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더욱이 벌크선 부문에서는 겨울 성수기를 맞아 초대형급 선박과 대형 및 중소형급에 이르기까지 전 선행의 운임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이사회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과 집행위원 교체

### EU chooses its European Council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representative

There was a seismic change in the organisation of the EU in the last few weeks of November. The EU chose Herman Van Rompuy as its first Permanent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and Baroness Catherine Ashton as the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who replaces Javier Solana,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Furthermore, José Manuel Barros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the full list of nominees for the positions at the new Commission on the 25th of November.

### EU를 대표하는 상임의장과 고위대표

지난 11월 말 EU 조직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었다. 11월 19일 EU는 사상 최초로 EU 대통령격인 EU이사회(European Union: 27개 EU 회원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정상회의)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으로 헤르만 판롬파워(Herman Van Rompuy)를 선출하였고, 하비에르 솔라나(Javier Solana) 공동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승계할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을 선출하였다. 또한 11월 27일에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이 차기 EU 집행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헤르만 판롬파워는 64세로 벨기에의 우파정당인 네덜란드어권(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과 불어권의 갈등으로 정당이 분리되어 있다) 기독교 민주당(Christen-Democratisch en Vlaams, CD&V)의 보수파 정치인이다. 그는 벨기에의 양대 언어권인 네덜란드어권과 불어권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시킨 정치인으로, 현재 벨기에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다.

벨기에는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의 갈등으로 총선이 치러진 2007년 6월 10일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 무정부 상태를 겪었다. 이는 벨기에의 총선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네덜란드어권 기독교 계통의 민주당이 불어권과의 연정 구성에 실패하여 9개월 동안 신정부가 출범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정 구성에 성공한 네덜란드어권 기독교 민주당의 이브 카미유 데지레 르테름(Yves Camille Désiré Leterme)이 2008년 3월 20일 총리로 취임하였지만, 집권 2개월도 안 되어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 갈등으로 연정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고, 결국 이브 르테름 총리는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일이 문제가 되어 2008년 12월 30일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불안정한 벨기에 정국을 안정시킨 정치인이 당시 벨기에 하원의장으로 총리에 취임한 헤르만 판롬파워였다. 그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벨기에 정국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리더십에 대해 벨기에 언론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헤르만 판롬파워 총리의 EU이사회 상임의장 선출은 최근 잘 봉합된 듯 보이는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의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캐서린 애슈턴은 53세로 현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다. 세습귀족인 애슈턴은 영국 상원 의원직을 자동 취득할 수 있었고, 1999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에 의해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 합류하여 정계에 입문하였다. 2007년 6월 28일,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애슈턴을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로 임명하였다. 애슈턴은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로서 미니 유럽헌법적인 리스본조약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캐서린 애슈턴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인물로 지난



10월 15일 한-EU FTA 가서명 당시 EU 측 대표였다. 캐서린 애슈턴은 그의 전임자였던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이 고든 브라운 정부의 기업혁신 기술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사임한 후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 3일 애슈턴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유럽의회에서 그의 비준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통상부문에 경험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인 다니엘 한난(Daniel Hannan)은 EU가 한국, 캐나다 그리고 WTO 차원에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애슈턴은 무역 분야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유럽의회 청문회 이후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는 538:40으로 애슈턴의 지명을 통과시켰다.

####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교체되었을 때, 한국 측에서는 협상 대상자의 교체로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애슈턴 집행위원은 신속하게 각국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예정대로 10월에 가서명을 할 수 있었다.

EU가 대통령격인 EU이사회 상임의장을 선출하고, 외무장관격인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선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이후 단일시장 성립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뛰어넘어 정치에서 협력을 발전시키는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유럽정치협력은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를 통해 공식화되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공동 외교안보정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은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할 5년 임기의 고위대표직 설치를 규정하여 외교 문제 발생 시 유럽 대표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리스본조약은 대외무대에서 EU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리스본조약

에 따라 EU이사회 상임의장은 세계무대에서 EU를 대표하고, 다른 EU 기관에 대해 EU이사회를 대표하고, EU이사회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U이사회 상임의장은 EU이사회에서 회원국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선출하며,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EU를 대표하며,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EU 각료들의 모임인 EU이사회 의 공동 외교안보정책 업무와 대외관계 담당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로써 그동안 EU이사회와 EU집행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던 대외관계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EU집행위원회에서 부집행위원장의 역할을 겸임하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와 EU이사회 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EU의 양대 중요 기구인 EU집행위원회와 EU이사회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번 EU이사회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롬파워와 애슈턴은 처음에는 후보군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EU이사회 상임의장 후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였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후보는 이탈리아의 마시모 달레마(Massimo D'Alema) 전 외무장관이였다. 그러나 유럽의회를 장악한 중도우파 그룹은 영국 노동당 출신의 블레어를 초대 EU이사회 상임의장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유럽의회의 일부 중도좌파 그룹도 블레어의 이라크전 지지를 이유로 블레어가 EU이사회 상임의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유럽의사회 상임의장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끝까지 블레어를 지지하던 영국 브라운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영국 노동당 출신인 애슈턴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되는 것을 대가로 블레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게 된 벨기에 판롬파워 총리가

EU이사회 상임의장이 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거론되던 이탈리아 중도좌파 출신의 마시모 달레마 전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親팔레스타인 성향이 강해 유럽 내 유대계 단체들이 그에 대한 반대 로비를 하였고,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도 반대하였다. 결국 EU이사회 상임의장에 중도우파를 포진시키고,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중도좌파 몫으로 남기면서, 블레어의 EU이사회 상임의장 진출 실패로 실망한 영국을 달래기 위해 EU 회원국 정상이 영국 노동당 출신의 애슈턴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선출하면서 일찍부터 후보로 거론되던 마시모 달레마는 꿈을 접어야 했다. 선출된 애슈턴도 선출 직전에 그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놀랐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번 EU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은 세계무대에서 EU의 입장을 조율하고 대표하는 데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데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선출 과정에서 유럽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유럽 정치인들의 밀실 야합에 의해 EU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EU 기구 내부의 민주적 절차의 한계를,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리스본조약 비준으로

##### 신임 EU 집행위원단 구성에 착수

지난 11월 3일 체코의 비준을 끝으로 EU 전체 회원국에서 리스본조약이 비준되면서, 차기 EU 집행위원단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2004년 11월 22일 업무를 개시한 현재 EU 집행위원단의 임기는 2009년 10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차기 EU 집행위원단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단이 지명되어, 유럽의회 인준을 받고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현재 집행위원회가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차기 EU집행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게 된 요인은 어떠한 조약이 차기 EU 집행위원회 구성에 적용될지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통한 리스본조약의 아일랜드 비준이 10월 3일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한 체코 헌법재판소가 11월 3일 리스본조약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체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까지, 어떠한 조약에 근거하여 차기 EU 집행위원단을 구성할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만일 리스본조약이 부결되면, 2003년 2월 1일 발효된 니스조약에 근거하여 EU 집행위원단을 구성해야 했다. 니스조약에 의해 차기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2009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EU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단 수를 현재 각국별로 집행위원이 안배되어 27명인 집행위원단 수를 27명 미만으로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차기 집행위원단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현재 27명의 집행위원단 수를 유지하고, 이후 집행위원단 수를 18명으로 감축하기로 규정하였다.

결국 리스본조약은 비준절차를 모두 마친 11월 4일에 가셔야 차기 EU 집행위원회 구성에 적용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EU집행위원회에서 현재와 같이 각국별로 집행위원을 배분하는 체제가 지속된다.

이 같은 틀에서 지난 11월 27일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차기 EU 집행위원단을 지명하였다.

#### 강대국 출신과 여성의원이 대거 약진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집행위원단을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차기 집행위원회의 우선 정책목표는 바호주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EU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를 역내시장 및 금융 서비스 정책 담당 집행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EU 내에서의 금융감







★ 차기 EU 집행위원단 구성

이름	출신국가	담당총국
José Manuel Barroso	포르투갈	EU 집행위원장
Catherine Ashton	영국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서 EU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겸임
Joaquin Almunia	스페인	경쟁정책
Michel Barnier	프랑스	역내시장 및 서비스
Olli Rehn	핀란드	경제통화 정책
Dacian Ciolos	루마니아	농업
John Dalli	몰타	보건 및 소비자 정책
Karel De Gucht	벨기에	무역
Stefan Füle	체코	EU 확장
Connie Hedegaard	덴마크	기후관련 정책
Maire Geoghegan-Quinn	아일랜드	연구 및 혁신
Janusz Lewandowski	폴란드	예산 금융 편성
Guenther Oettinger	독일	에너지
Janez Potocnik	슬로베니아	환경
Neelie Kroes	네덜란드	디지털 어젠다
László Andor	헝가리	고용, 사회 정책 및 통합
Maria Damanaki	그리스	해운 및 어업
Johannes Hahn	오스트리아	지역정책
Rumiana Jeleva	불가리아	국제협력, 인도주의 업무, 위기대응
Siim Kallas	에스토니아	운송
Cecilia Malmström	스웨덴	내무
Andris Piebalgs	라트비아	개발
Viviane Reding	룩셈부르크	사법, 기본권 및 시민권
Algirdas Šemeta	리투아니아	조세 및 관세동맹
Antonio Tajani	이탈리아	산업 및 기업 업무
Androulla Vassiliou	키프로스	교육, 문화, 언어 및 청소년
Maros Sefcovic	슬로바키아	국제관계 및 행정

자료: EU집행위원회

독체제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 주 총리 출신의 귄터 외팅거(Guenther Oettinger)를 임명한 것은 독일과 러시아 간의 밀접한 에너지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차기 EU 집행위원단 구성에서 강력한 EU집행위원회 구성만큼 주목받은 것은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7명의 차기 EU 집행위원단 중에 9명이 여성이다. 이는 전체 지명자의 3분의 1이 여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차기 EU집행위원회의 ‘여풍’은 바호주 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에 여성 후보 지명을 적극 요청한 결과다.

그리고 바호주의 차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중 14명은 현 집행위원 출신이다.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경제통화 정책을 담당하게 된 올리 렌(Olli Rehn)은 현 EU 집행위원회의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이다. 또한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경제통화 정책을 담당하던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는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새로운 사고의 완벽한 조화”라고 자찬하였다.

이번에 지명된 차기 집행위원은 2010년 1월 유럽 의회의 청문회와 인준투표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 차기 집행위원단 업무 개시 일정(예상)

일시	내용
2010년 1월 11~19일	유럽의회에서 지명된 차기 집행위원에 대한 청문회
2010년 1월 26일	유럽의회 인준 투표
2010년 2월 1일	차기 집행위원회 업무 개시

자료: EU집행위원회

이번 차기 집행위원회 구성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것은 바호주 위원장이 인정할 정도로 각국이 집행위원회 요직에 자국 출신 집행위원을 앉히려는 압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집행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출신국의 이해가 아닌 EU 전체의 이해를 대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한-EU FTA를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

## Korea must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ws prior to conclusion of Korea-EU FTA

The European Commission recently released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Enforcement Report 2009.” This report points out that while Korea has improved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vironment to a certain degree, it still shows weaknesses in the length, costs, and uncertainty of the outcome of proceedings. As the Korea-EU FTA is expected to strengthen Korea's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the costs of royalties for using patented products are expected to rise. This is likely to widen its services trade deficit, but many firms, however, do not currently have clear strategies for mitigating such costs.

###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집행보고서를 발표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집행보고서 2009>를 발표하였다. 지적재산권 집행보고서는 유럽 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법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세계에서 이들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와 해당국가의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EU집행위원회의 협상 결과 그리고 EU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데이터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2007년에 비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의약품은 118% 증가했으며, 전자제품은 38% 증가했다. 따라서 EU는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설문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장 열악하고 EU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우선 감시대상국’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위협

적인 국가는 중국이 꼽혔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등이 뒤를 이었다. EU 세관에 보관 중인 전체 물품 중 중국제품의 비중이 54%를 차지할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했으며, 인도는 의약품에서, 인도네시아는 식료품이나 음료수에서 침해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신흥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 ★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

단계	국가
1	중국
2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주: \*는 최근 크게 개선된 경우  
자료: EU집행위원회, IPR Enforcement Report 2009.

EU집행위원회는 2006년 지적재산권 설문조사를 처음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국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비용, 그리고 집행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매상점과 시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모조품들 역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온라인 해적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



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을 모조품 통과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인근 국가의 여행자들이 한국에서 모조품임을 알고서도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등록이 적시에 업그레이드되고, 관세청과 같은 유관 기관들이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관련 특별 패널이 설치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집행 정책에의 적극적 참여,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행사 및 보상절차 개선,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들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관절차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 및 회원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EU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들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EU는 2008년 27개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모조품 약 1억 7,800만 점을 적발했다. 2007년(약 7,900만 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을 적발한 것이다. EU는 투자 확대를 위해 모든 투자대상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모조품 유통에 국제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각별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여름휴가 시의 구매 행태가 모조품을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라고 지적하며, 몇몇 회원국들이 휴가철에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휴가지에서는 보통 모조품 선글라스나 핸드백, 유명 축구선수 유니폼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천 유로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개별 회원국 차원의 보호조치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이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당국이 소위 모조품 구입자에게도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모조품을 거래하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이나 3년간의 징역형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모조품 때문에 정품 브랜드들이 연간 100억 파운드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한-EU FTA 협정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강화

최근 EU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EU는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최고 관심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해외시장 개방과 유럽 첨단기술 제품의 경쟁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강화되고 있다. 과거 FTA 협상 사례와 달리 EU는 EU의 제도와 동일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했다. 특히 EU는 FTA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적용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전통지식 등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EU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만큼 민감한 사항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리적표시제도(GI),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등이다. 먼저 지리적표시제도란 지역 특산품에 대해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주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주고 있다. 먼저 지리적표시제는 상품 중 지리의 명칭을 딴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자는 제도다. 예컨대 한국에게 친숙한 보르도, 샴페인, 꼬냑, 스카치위스키 등은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인 만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대상이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세계적인 상품이 많은 EU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샴페인 등의 명칭을 딴 제품이 한국도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서 쉽게 수용하기 힘든 문제이다. 협상과정을 통해 지리적표시제도

의 적용은 당초 EU 측의 요구 수준에 비해서는 완화됐지만, WTO 협정의 포도주·증류주 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행상표는 그대로 두자는 데 합의했다.

#### ★ 양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 건수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	64
EU	60	80	22	162

주: 한국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북분자 등이 있으며, EU는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꼬냑, 스카치 위스키, 까망베르드노르망디 등이 있음.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추급권<sup>1</sup>(Artist' Resale Rights) 역시 협정문상의 의무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EU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을 요구하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되었다. 민사구제 측면에서 한-EU 양측은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법당국이 침해의심 물품을 압류, 폐기, 금전적 보상 지불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대안으로써 침해자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불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기초

<sup>1</sup>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  
<sup>2</sup>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시행 유예  
<sup>3</sup> 단순도판(정보의 단순전송), 캐싱(정보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정보의 자동적 중개적, 임시적 저장), 호스팅(정보의 저장)

로 손해배상액을 일괄지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더 나아가 상업적 목적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 및 도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제10.58조), 징역형 또는 벌금형(제10.59조),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와 도구 및 그 밖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제10.60조) 등이다.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의 경우는 현행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sup>2</sup> 적용절차도 환적의 경우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sup>3</sup>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 ★ 현행 국내법과 한미 FTA의 비교

관세법 및 한미 FTA	한-EU FTA
- 상표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	- 상표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상품 -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
-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 직권 및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 향후 對EU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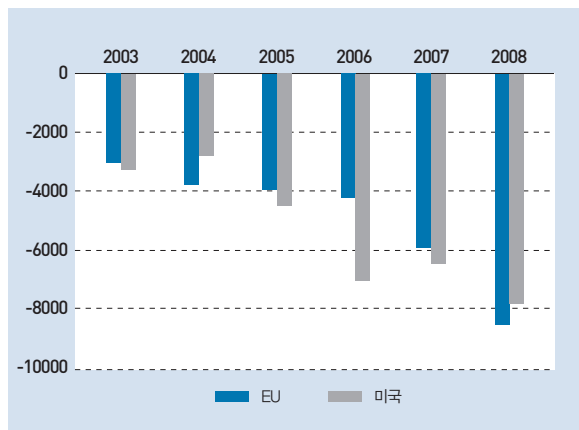
한-EU FT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다면 특허권 등 사용료 지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가장 많이 본 대상국은 EU다. 적자규모는 85억 6,61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2004년 이후 2위 자리에 머물렀던 EU가 2008년 미국을 제치고 1위







★ 한국의 對EU 서비스수지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리를 탈환한 것이다. 2008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총액은 167억 3,36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EU가 차지한 셈이다.

법률·회계·경영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이미 2008년 38억 3,98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해 일곱 배, 2007년에 비해 두 배나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사업 서비스에 이어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두 번째로 기여하고 있는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적자는 2008년 8억6,970만 달러로, 2007년 9억1,230만 달러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회계·경영 컨설팅·금융 등은 한-EU FTA 발효 이후 순차적 개방을 앞두고 있는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對EU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FTA 발효 이후 EU와의 상품 교역에서 흑자가 늘어난다 해도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 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집행의 강도가 약하다보니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피해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23.9%가 지난 1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와 모조품, 불법복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34.3%나 차지했다. 유형별로 본 기업의 피해는 해외 기술유출 적발금액 80조 원(2008년),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 예상액 17조 원(2006년), 불법복제 피해액 2조 원(2008년) 등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거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36.4%에 그쳤고, 가해자와 협의해 종결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6%로 더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불법행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48.9%), 법률지식과 정보 부족(26.1%), 법령의 허점이나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19.6%)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끝으로 응답 기업들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과제로 엄정한 법 집행(56.7%), 준법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4%), 경제범죄 감시 및 단속인력 확충(8.2%) 등을 꼽았다.

물론 EU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조치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 증가 등 한국에게는 불리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래저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EU 낙농업

## Rising competition in global dairy market threatens EU dairy farmers

The European Union reintroduced export subsidies for dairy produce in January and decided to give an additional aid of 280 million euros to its dairy farmers in October, 2009. EU Farm Commissioner said that she was forced to “empty her pockets” by a group of countries led by France and Germany after world dairy prices decline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08. Even after such decisions have been made, the dairy producers are still not satisfied especially because the EU’s plan to phase out its milk quotas by 2015 has not been changed. The EU is the biggest dairy exporter in the world, but its share is on a decline despite the total value of its dairy exports is increasing.

EU집행위원회는 10월 1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농업장관회의에서 피해농가에 2억 8,000만 유로(약 5,000억 원)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과 2006년 사이 100kg당 27~29유로를 기록 하던 EU국가들의 평균 우유가격은 2007년부터 국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민감 산업인 낙농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08년 중순부터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EU는 2009년 1월 낙농업 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보조금 규모는 2,299톤 규모의 버터에 대해 1톤당 500유로, 5,612톤의 탈지분유에 대해 1톤당 200유로로 확정되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연간 각각 3만 톤과 10만 9,000톤으로 결정되었으나, 가격 변동에 따라 이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

피셔 보엘 EU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은 1월 당시 국제시장 가격이 EU의 시장 가격과 시장개입 가격 밑으로 하락하여 유럽 낙농수출업체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소규모 낙농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대 EU 농업정책의 과도한 지원은 낙농업계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였고 ‘우유 호수’와 ‘버터 산’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1월에 발표한 수출보조금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의 일시적 정

책이며, EU는 우유쿼터제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1980년대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장관회의에 앞서 농업/농촌개발 집행위원회는 유럽 낙농업체가 처한 단기 및 중장기적 문제점을 인정하며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sup>1</sup>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9월 사이 버터 가격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4%, 8% 상승하였고, 치즈 가격은 5~7% 가량 상승하였다. 우유 가격은 8월 한 달간 거의 2% 가량 상승하였는데, 이는 낙농업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농부에게 1인당 1만 5,0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우유쿼터 구매정책 기준을 더욱 느슨하게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대응과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낙농업에 대한 EU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는 1,000명이 넘는 프랑스 농부들이 수백만 리터의 우유를 들판에 들어부으며 항의를 하였고 낙농업체들은 파업에 들어가 우유배달을 중단하였다. 10월에는 벨기에 농부들이 300만 리터의 우유를 버

<sup>1</sup> EUROPA RAPID (2009. 9. 17.), Milk: Commission proposes further measures to help dairy sector in short, medium and long term. Press releases.







리며 시위를 하였다. 농민들은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고, 우유쿼터제를 2015년까지 폐지시키려는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유럽 낙농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농업장관회의를 앞두고 유럽 농민들은 EU이사회 본 건물 앞 도로에 우유를 쏟아버리고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21개 EU 국가들은 EU집행위원회에 지원 규모를 늘리라는 압력을 넣었다. 스웨덴 농산부 장관 에르란드손(Erlandsson)은 우유의 소매가격이 1~2% 하락한 반면, 산지 가격은 40% 하락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영국은 비효율적인 낙농업체를 납세자와 소비자가 지원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지원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 보엘 집행위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낙농업체의 국가들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10월 19일 EU집행위원회는 낙농업계에 2억 8,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보엘 집행위원은 다수의 회원국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특별구매정책을 최소한 2010년 2월까지의 연장시킬 것으로 결정하고, 유럽의회는 이 같은 정책을 치즈에 적용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낙농업체는 여전히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세계 낙농시장에서 EU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2006년 EU25의 낙농제품 수출규모는 210억 유로로 오세아니아의 38억 유로와 NAFTA의 11억 유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U의 낙농제품 수출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유럽의 낙농제품 수출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1997년 79%에서 2004~2006년 72%로 하락하였고, EU15의 역외수출만을 고려했을 경우 18%에서 14%로 하락하였다. 국제수요가 EU의

생산량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15의 비중은 75%에서 67%로 하락한 반면, 신규 회원국들의 비중은 3%에서 6%로 증가하였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총 국제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에서 15%, 14%에서 15%, 12%에서 11%로 하락하였다. 반면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p 0.7%p 0.5%p, 0.2%p 증가하며 유럽의 낙농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높은 경쟁력을 지닌 뉴질랜드의 유제품, 그중에서도 분유산업이 세계수요 증가를 통해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유럽이 세계 낙농품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였다. EU27의 비중은 68%에서 64%로 EU15의 비중은 66%에서 61%로 하락한 반면, EU12 국가들은 1%에서 3%로 상승하였다.

### ★ 주요국 낙농제품 교역량 비중

	수출 비중 (%)		수입 비중 (%)	
	'95~'97	'04~'06	'95~'97	'04~'06
EU27	79	72	68	64
EU15	75	67	66	61
EU12	3	6	1	3
뉴질랜드	8	8	0	0
미국	2	3	3	4
아르헨티나	1	1	0	0
캐나다	1	1	1	1
브라질	0	0	2	0

자료: UN Comtrade; LEI (2009), Competitiveness of the EU dairy industry.

세계시장에서의 낙농업 산업경쟁력은 각국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발라사 현시비교우위지수(Balassa Index)<sup>2</sup>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U의 낙농업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과 비교하여 자국의 다른 산업들보다 경쟁우위를 보인다.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sup>2</sup> 발라사 지수는 국가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일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보여주는 데 이용된다.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품목이 자국의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 주요국 낙농업의 발라사 현시비교우위 지수(Balassa Index)

	1995~1997	2004~2006	연평균 성장률(%)
EU27	1.81	1.79	-0.1
EU15	1.82	1.81	0
EU12	1.67	1.56	-0.8
미국	0.16	0.3	7.1
아르헨티나	2.01	3.55	6.6
캐나다	0.2	0.15	-2.8
브라질	0.04	0.24	21.2
뉴질랜드	26.38	39.13	4.5
호주	3.7	3.94	0.7

자료: UN Comtrade; LEI (2009), Competitiveness of the EU dairy industry.

### EU의 생산규모와 소비 패턴

EU 무역 비중의 변화는 EU의 생산규모와 연관되어 있다. EU27은 2003년 1.3억 톤의 우유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가장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한 국가는 독일(2,732만 톤), 프랑스(2,297만 톤), 영국(1,365만 톤) 순으로, 1998년 이래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버터 생산국은 독일(45만 톤), 아일랜드(22만 톤), 프랑스(41만 톤), 네덜란드(17만 톤)이고,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생산량이 1998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버터 생산량은 8.9%와 20.7% 증가한 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5.3%, 3.8% 하락하였다.

한편 EU의 치즈 산업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들과 다르게 선전하고 있다. 1998년과 2008년 사이 가장 높은 치즈 생산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크로아티아(332%), 라트비아(236%), 리투아니아(206%)로 주로 EU의 신규 국가들이 차지하였다. 총 규모로는 독일이 2008년 194만 톤, 프랑스 187만 톤, 이탈리아

가 116만 톤을 생산하여 1~3위를 차지하였고, 1998~2008년 사이 성장률은 각각 24%, 13%, 15%를 기록하였다. EU27의 치즈 수출 비중은 세계 치즈 수출규모의 81.5%이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이 45%를 차지한다. 이런 결과는 치즈 생산이 유럽의 전통산업이라는 점과 제품개발능력을 고려하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EU 치즈 수요의 상당 부분은 역내공급으로 충족되고 있다. EU 치즈 수출 중 18.5%만이 역외로 수출된다. EU는 2006년 3억 2,500만 유로 상당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부터 7,300만 유로 상당의 치즈를 수입했다. EU의 주요 치즈 수입국들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이며, 주요 수출국들은 이 국가들과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이다.

EU 낙농제품 수요의 상당 부분은 EU 내에서 발생한다. EU27의 2006년 1인당 우유소비량은 2000년의 73kg에서 소폭 하락한 71kg이었는데, 소비규모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 소비량이 늘고 있으며, EU25는 2000년 1인당 15.9kg를, 2005년에는 16.6kg를 소비하였다. 우유 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치즈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유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반면, 치즈는 각국마다 다르다.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을 제외한 EU 국가들의 2005년 치즈 생산규모는 2000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5년 뉴질랜드의 자급자족 지수(100=자급자족)는 1,000을 넘었으나, 이는 낮은 수준의 국내소비량 때문이지 뉴질랜드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치즈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의 치즈 자급자족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높은 편이다.

### EU의 낙농업과 한-EU FTA

EU 낙농업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낙농기업들은 대부분 EU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주요 4대 기업인 네슬레(스위스), 락탈리



# 리스본조약 발효가 한-EU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adoption of Lisbon Treaty on Korea-EU FTA ratification

The treaty signed at the Lisbon summit on the 13th of December, 2007 finally entered into force on the 1st of December, 2009. The Lisbon Treat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more effective European presence on the world stage and the EU will have a stronger and more unified voice when negotiating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s a result. Korea and the EU managed to initial their trade deal on the 15th of October, but it is not yet clear as to when the agreement will come into for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some troubles ahead prior to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adoption of the Treaty is expected to affect the timing of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TA.

### 리스본조약하의 EU의 통상협정체결권

2007년 12월 13일 EU 정상들이 공식 서명한 리스본조약은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EU조약 및 EC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sup>1</sup>이다.

TFEU는 제V장 국제협정(TITLE V International Agreements)이란 제하에 제216조~제219조 4개 조문을 두어 EU 차원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TFEU 제217조는 EU가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하는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연합은 상호간의 권리·의무, 공동행동 및 특별절차에 관련된 협력을 위한 협정을 하나 혹은 복수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할 수 있다." AA는 국제조직보다는 주로 EU와 제3국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서 EU는 제3국과 다양한 형태의 AA를 체결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EC조약에 비하여 국제협정의 체결 절차와 방식을 상당히 수정했다. 특히 국제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참가 권한이 강화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2009년 7월 13일 협상이 타결되어 10월 15일 가서명(initialing)된 한-EU FTA<sup>2</sup>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칠레 FTA의 경우, 2002년 11월 정식서명 후 2003년 2월에 잠정발효되었고, 정식발효는 2005년 3월 1일자로 잠정발효 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보더라도 가서명된 한-EU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한국과 EU 양측의 비준 절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EU에 있어 통상협정이 체결되는 절차와 그 협정의 효력 및 EU 기관 간 권한행사의 배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 발효가 한-EU FTA 비준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중요해졌다.

### 리스본조약하의 통상협정 체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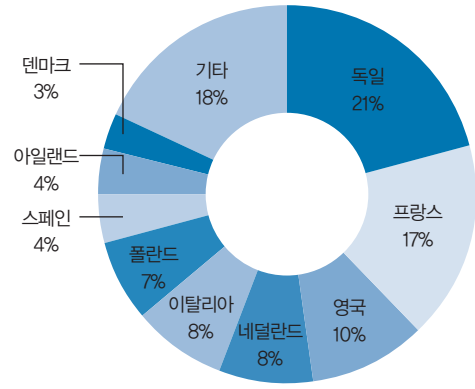
EU에서는 국제협정(구체적으로는 통상협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 체결되는가?

첫째,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교섭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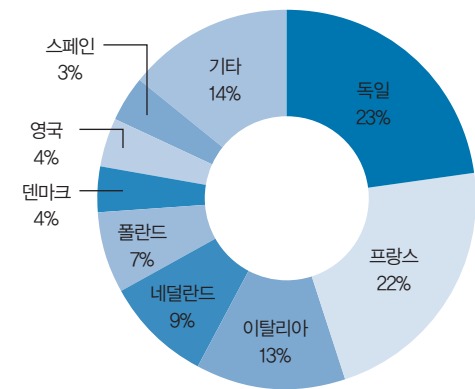
<sup>1</sup> European Commission (2007. 12. 17.). Treaty of Lisbon, Official Journal, C 306.; European Commission (2008. 5. 9.).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Official Journal, C 115. 이 가운데 특히 'EU운영조약'은 기존의 EC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EU만이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 그 명칭도 'EU' 운영조약으로 바뀌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은 TEU,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은 TFEU로 약칭한다.

<sup>2</sup> 협정문 원문은 외교통상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eu.asp?country\\_idx=21](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eu.asp?country_idx=21)> (2009. 11. 26.)

### ★ 2007년 EU의 우유 및 치즈 생산량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



우유: 1억 3,286만 톤



치즈: 852만 톤

자료: Eurostat

스(프랑스), 다농(프랑스), 아를라(스웨덴/덴마크)의 2006년 총매출액은 158억, 96억, 79억, 61억 유로였다. 2007년 전 세계 주요 대표 낙농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sup>3</sup> 결과를 살펴보면, 다농, 네슬레, 아를라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낙농기업 1~3위로 뽑혔다. 다농의 경우 액티멜(Actimel)이라는 박테리아 요구르트 제품으로 한 해 동안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다. 또한 LEI의 조사에 따르면, EU27개국이 전 세계 낙농업의 혁신 부문에서(제품, 생산 공정,

<sup>3</sup> Hall, R. (2007). Innovation and NPD in dairy. Business Insights.

<sup>4</sup> 세계 낙농업 혁신 부문에서 EU는 61%, 미국은 19%, 뉴질랜드는 4%를 차지

마케팅, 조직구조, 신재료 개발 포함)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EU 기업들은 마케팅, 경영관리, 생산 라인의 개선보다는 제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제품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 ★ 낙농제품 관련 한-EU FTA

	관세율 (%)	수입액 (1,000달러)	양허단계
치즈	36	20,238	15년+TRQ
유장	49.5	9,616	10년+TRQ
전지/탈지분유	89~176	2,738	TRQ
조제분유	36~40	2,566	10년+TRQ
버터	89	972	10년+TRQ

주: 품목 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자료: 외교통상부 (2009. 10.). "한-EU FTA 설명자료".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낙농제품에 대해 10년 이상의 양허기간과 무관세 물량(Tariff Reduction Quota)을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간 낙농품의 관세율은 탈지/전지분유 176%, 버터 89%, 치즈 36%로 높은 수준이며, 양허기간 또한 길다. 한편 여러 낙농제품 중 우유만이 한국의 주요 민감 품목이기 때문에 FTA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낙농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농촌진흥청은 치즈 소비 촉진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목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치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20여 종의 치즈 생산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무지방 우유, 비타민 우유, 소용량 우유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통한 생산 라인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EU의 최상급 낙농품과 힘을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시를 승인해야 한다.<sup>3</sup> 개시 승인과 더불어 이사회는 교섭 방침을 정하여 교섭책임자에게 지침을 하달한다.<sup>4</sup>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sup>5</sup>를 설치할 수 있다.<sup>6</sup>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sup>7</sup> 이 점에서 보면, 조약체결권은 이사회에게 있지만 그 체결을 위한 실무적 단계의 교섭은 집행위원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섭 결과 그 내용이 타결되면 교섭책임자는 이사회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라 이사회는 협정의 서명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협정의 발효 전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sup>8</sup>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기도 한다.<sup>9</sup>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록 이사회가 협정 체결에 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유럽의회의 동의와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AA는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0</sup>

셋째, 위의 두 번째 사항과는 달리 이사회는 협정 체결 시 교섭책임자에게 당해 협정의 개정을 약속절차에 따라 행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또는 협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 때에도 이사회는 EU의 이름으로 당해 협정의 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일부 협정을 제외<sup>12</sup>하고 협정 체결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결정된다.<sup>13</sup>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종결된다. 하지만 당해 협정이 발효되기 전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즉, 회원국, 유럽의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예정된 협정과 제조약과의 적합성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만일 ECJ의 판단이 부정적일 때 당해 협정은 이 협정 또는 제조약이 수정된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sup>14</sup>

### 국제협정의 효력

EU가 체결한 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리스본조약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체결된 협정은 EU 법의 일부가 되어 특별한 조치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TFEU 제216조 2항은 EU가 체결한 협정은 EU뿐만 아니라 회원국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ECJ도 Hauptzollamt Mainz v. Kupferberg 사건 판결에서 “EC가 체결한 조약은 EC 법 체계로 편입되고, EC 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제3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EC에 대해서도 조약을 적절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sup>15</sup> EC는 리스본조약에 의해 EU에 대체·계승되었으므로 이 내용은 현재의 EU가 체결하는 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sup>10</sup>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정, 즉 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유럽인권협약)에 EU의 가입에 관한 협정 ② 협력절차 도입에 의한 특별한 제도적 틀을 창설하는 협정 ③ EU에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과하는 협정 ④ 일반입법절차 또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때는 특별입법절차가 적용되는 분야에 관한 협정도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TFEU 제218조 6항 (a)). 그 외의 경우에는 유럽의회의 자문을 얻은 후 채택한다(TFEU 제218조 6항 (b)).

<sup>11</sup> TFEU 제218조 7항

<sup>12</sup> 이사회는 전원일치를 요구하는 분야에 관한 협정이 EU의 입법행위의 채택을 필요할 때,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의 협력협정 또는 제212조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는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 대한 연합의 가입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이 협정의 체결에 대한 결정은 가입국이 자국의 헌법적 규정에 따라 동의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TFEU 제218조 8항).

<sup>13</sup> TFEU 제218조 8항

<sup>14</sup> TFEU 제218조 11항

<sup>15</sup> 15. Case 104/81, Hauptzollamt Mainz v. Kupferberg [1982] ECJ 3641, para. 13.

### 통상협정 체결에 있어 EU 기관 간 권한행사의 문제

EU가 제3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정 체결을 위한 발의권을 가지는 것은 집행위원회이다. 즉,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통상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권고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그 권한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교섭을 담당한다. 한편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당해 통상협정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중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볼 때, 비록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의 승인, 교섭 방침의 확정, 서명 승인 및 협정 체결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지만 통상협정의 체결에 관한 EU의 권한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게 분할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EU 기관 간 통상협정의 체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럽의회의 자문과 동의권이다. 이에 관하여 리스본조약은 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유럽의회의 자문이 아니라 동의를 얻은 후 채택되도록 함으로써<sup>16</sup> 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ECJ의 권한 행사도 간과할 수 없다. 만일 통상협정과 TEU·TFEU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ECJ의 사법적 판단을 거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의 요구는 회원국,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만이 아니라 유럽의회도 할 수 있다. 만일 ECJ의 사법적 판단 결과, 통상협정이 TEU·TFEU와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 통상협정 또는 TEU·TFEU가 수정되지 않고는 통상협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sup>17</sup>

### 한-EU FTA의 비준에 대한 전망

위의 분석에 비추볼 때, 리스본조약의 발효가 향후 EU 내부의 한-EU FTA 비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래와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sup>16</sup> TFEU 제218조 6항 (a)

<sup>17</sup> TFEU 제218조 11항

첫째,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어 가서명이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비준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로비와 더불어 압력을 행사하여 협정 비준을 저지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에게 맞서서 집행위원회도 나름대로 협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럽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가 과열되면 비준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EU FTA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ECJ에 동협정과 TEU·TFEU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희박하지만 일부 회원국 또는 유럽의회가 사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경우는 이미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사회를 통해 반영되고 조율된 상태이므로 굳이 ECJ에 사법적 판단을 구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문제는 유럽의회인데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이 거세고, 의회 의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면 ECJ에 제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잠정적용 가능성의 문제이다. 만일 유럽의회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혹은 유럽의회가 ECJ에 제소할 경우 양 당사국은 협정의 잠정적용을 합의할 수도 있다. 한-EU FTA 제15.10조 5항은 (a)호~(d)호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잠정적용에 의한 FTA의 발효는 ‘한시적’이며, 확정적·최종적으로 발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잠정적용에 의한 협정의 발효도 공식발효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EU 역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공식발효하게 될 것이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 공식발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3</sup> TFEU 제218조 2항

<sup>4</sup> TFEU 제218조 4항

<sup>5</sup> 위원회는 제3국과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의 보좌를 받는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TFEU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회는 TFEU 제242에 의거하여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sup>6</sup> TFEU 제218조 4항

<sup>7</sup> TFEU 제218조 4항

<sup>8</sup> 잠정적용은 조약이 긴급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비준을 요하는 경우에 채용되는데, 이 경우 잠정기간이 지나면 당사국들에게 자동적으로 비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잠정적용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조약법에 관한 조약법 조약 제25조). “당사국들은 조약의 채택 혹은 서명과 발효 사이에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적용(provisionally applied)’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한-EU FTA 제15.10조 5항은 (a)호~(d)호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sup>9</sup> TFEU 제218조 5항





# EU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 Fair trade and ethical consumerism in EU

The original Mcdonald signs of red and yellow are being replaced by signs in green and brown at its restaurant chain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This is a part of corporation's strategy to emphasise its eco-friendly image in the market. A rising number of EU corporations are trying to be socially responsible by making their activities and products more eco-friendly. Demands for their products are rising and consumers enjoy the feeling of playing their parts to curb global warming and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ir countries. Producers have also found that they can raise their profits by improving their public image through emphasising the ethical side of their activities.

맥도날드(McDonald)하면 빨간색 바탕의 노란색 로고가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이 로고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일부 매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짙은 황록색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막스 앤드 스펜서(Marks and Spencer)와 세인즈버리(Sainsbury)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와 커피, 그리고 샌드위치 체인점인 프레 따 망제(Pret A Manger)와 이트(EAT)에서 판매되는 따뜻한 음료들은 모두 공정무역(Fair Trade)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4개 중 1개가 공정무역상품이고, 세인즈버리와 웨이트로즈(Waitrose)에서는 공정무역 바나나만 판매하고 있다.

EU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EU에서는 최근 환경친화적인 공익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 또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기업은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이 강화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공익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같은 이익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공정무역과 EU 소비시장 변화

EU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지배력과 소비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의 제3국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여론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된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공평한 국제 무역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는 1960년대 영국의 자선단체인 옥스팜(Oxfam)이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된 수공예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소비자 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공정무역이 최근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2002년부터 정부가 '사회라벨(Label Social)'을 법으로 제정해 기업의 공정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현장의 기본원칙을 존중해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에 라벨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 라벨을 획득한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점차 증가하여 2002년 32%에서 2005년에는 66%로 증가하였고, 공정무역 인증 마크에 대한 인식 역시 2004년 48%에서 2006년 54%로 증가하였다.

EU의 공정무역재단인 막스 아블라 프랑스(Max

Havelaar France)에 의하면 공정무역에 대한 프랑스 시민의 인식은 2000년도에 9%에서 2007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7년 프랑스 가구 중 23.6%가 막스 아블라 인증을 받은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했고, 이는 이 상품에 평균 3.31유로를 지불했음을 의미한다.

시장조사기관인 TNS에 따르면 영국의 공정무역 품에 대한 인식은 2000년 12%에서 2009년 72%로 증가했으며, 공정무역상품에 대한 가구당 소비액 역시 2008년 18.19파운드에서 2009년 19.17파운드로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공정무역상품 판매에 있어 수년간의 침체기를 겪은 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두 배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꽃이나 바나나 같은 새로운 공정무역상품의 도입이 그 주요 원인으로 나타

났으며, 독일의 2대 항공사인 에어 베를린(Air Berlin)의 기내 커피도 2006년 이후 전부 공정무역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U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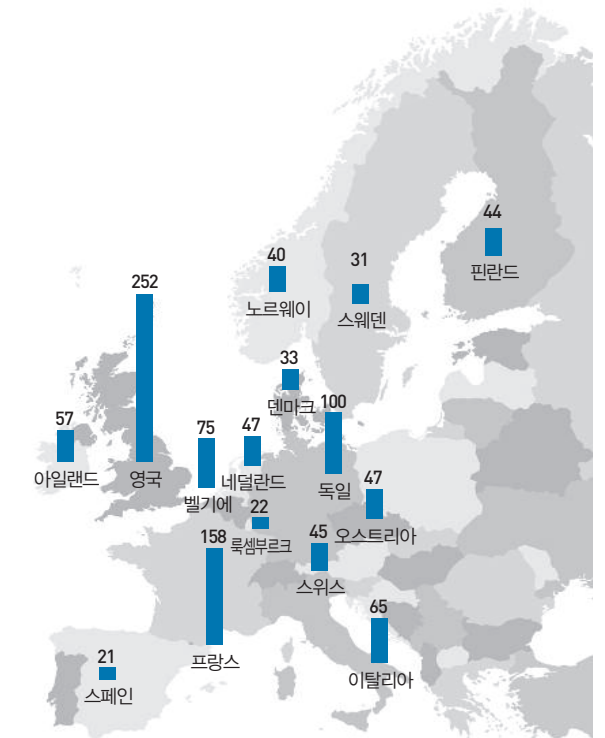
2009년 5월 EU집행위원회는 <공정무역의 역할과 무역 관련 지속성 보장계획에 관한 성명서(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of Fair Trade and non-governmental trade-related sustainability assurance schemes)>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EU의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는 1999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그 시장은 70배 이상 증가하였다. 당시 회원국들에서는 이미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기준과 면허 수 또한 다양했다.

★ 공정무역 인증(Fair Trade Certification) 상품 국가별 소비액 (단위: 유로)

국가명	1인당 공정무역품 소비액
영국	11.57
프랑스	3.31
독일	1.72
네덜란드	2.9
덴마크	7.27
벨기에	3.31
룩셈부르크	6.72
스위스	21.06
오스트리아	6.36
이탈리아	0.66
스페인	0.09
아일랜드	5.4
노르웨이	3.87
스웨덴	4.66
핀란드	6.56
미국	2.43
캐나다	2.42
일본	0.05
호주 & 뉴질랜드	0.44

주: 2007년 기준  
자료: Krier, J. M. (2008, 8.), Fair Trade 2007: New Facts and Figures from an ongoing Success Story. The Dutch Association of Worldshops. ([http://www.fairtrade-advocacy.org/documents/FairTrade2007\\_newfactsandfigures.pdf](http://www.fairtrade-advocacy.org/documents/FairTrade2007_newfactsandfigures.pdf)) p. 19.

★ 공정무역 인증(Fair Trade Certification): 면허 수



주: 2006년 기준  
자료: Krier, J. M. (2008, 8.), Fair Trade 2007: New Facts and Figures from an ongoing Success Story. The Dutch Association of Worldshops. ([http://www.fairtrade-advocacy.org/documents/FairTrade2007\\_newfactsandfigures.pdf](http://www.fairtrade-advocacy.org/documents/FairTrade2007_newfactsandfigures.pdf)) p. 20.







EU에서는 현재 전 세계 공정무역 거래의 60~7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웨덴과 같이 공정무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신생 회원국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EU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NGO와 협력해 EU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946만 유로를 지출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매년 1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다양한 제도와 기준들이 이해당사자 간에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친환경 제품과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상품과 함께 EU 소비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다. ‘의류와 환경’에 관해 2008년도에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소비자들의 80%가 의류 구매 시 환경 관련 이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EU 최대 의류소매업체 가운데 스웨덴의 H&M과 스페인의 망고(Mango)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업체들에도 감축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H&M의 경우 2005~2009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친환경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의 M&S도 2012년까지 탄소 중립(carbon-neutral)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EU 시장에서는 ‘녹색 소비’에 대한 개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재활용 사무용품 등 모든 소비영역에 걸쳐 친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럽인들의 소비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에서는 환경라벨<sup>1</sup>을 붙인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EU 에코라벨을

비롯하여 독일과 노르딕 국가들이 각각 EU를 대표하는 환경 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1977년 최초로 환경라벨제도를 도입 및 시행한 국가로 블루엔젤(Blue Angel)이라는 환경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대상품목을 정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노르딕 스완(Nordic Swan)이라는 환경라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복수 국가 간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가 EU, 독일과 노르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라벨제도가 제정된 후 환경라벨 인증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였으며, 개인 소비자보다 기관 및 공공조달 부분의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라벨 인증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라벨은 향후 상품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환경 라벨과 더불어 ‘녹색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EU 각국의 정책 수단도 다양하다. EU 각국은 ‘에너지 소비량/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도로세, 탄소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유해가스 과다배출차량의 도시 진입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친환경 차량 구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공공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기·전자 제품 중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품 구매 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식이다. 이 외에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는

<sup>1</sup>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친화제품을 구매·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제도.

건축자재 구매 시 태양열 집열판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열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자재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런 자재들에 환경 라벨을 붙이는 한편,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와 EU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실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영국의 600개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브랜드 탄소배출(Brand Emission)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60% 가량의 탄소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의 코펜하겐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기업은 탄소배출량에 관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방출 기준으로 34%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5개 기업 중 1개만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와 통신기업인 티-모바일(T-Mobile), 컴퓨터사인 델(Dell)과 자동차업체인 BMW가 그 선두에 있었다. 반면 구글(Google), 맥킨지(Mckinsey), 아마존(Amazon) 등을 포함한 250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포르세(Porsche), 하비 니콜라스(Harvey Nicholas), 버거킹(Burger King), 페이스 북(Face book)을 포함한 320개 브랜드는 공공배출 감소에 관한 목표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중 122개 브랜드는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바클레이즈(Barclays), 스카이(Sky), 이베이(eBay)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인 중 78%가 좀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EU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상품’에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 증가에 비해 기업들의 노력은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EU 상위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프랑스의 한 트렌드 컨설팅 회사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소비문화 흐름 중 하나로 ‘윤리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친환경 상품 구매 또는 사회공헌활동 같은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 행태가 재편되는 경향에 주목한 것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를 하자는 ‘착한 소비’ 개념의 확산도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를 담은 상품 개발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미래수요 창출을 위한 자체 기준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EU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

## EU corporations' R&D investment still growing fast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200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in November. This report analyses the level of R&D investment of the top 1,000 EU companies and the top 1,000 non-EU companies. It shows that the world's total R&D investment grew by 6.9% in 2008 despit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R&D investment of EU companies grew faster than those of the US and Japan. Each sector in economies has different levels of contribution to the overall R&D growth. This report shows how different sectors have been affected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and how individual companies' positions on the scoreboard have changed compared to last year.

11월 EU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2009 EU 산업의 R&D 투자 스코어보드>는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EU 1000대 기업과 非EU 1000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기업들의 전반적인 R&D 추세를 살펴보고,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지역·산업별 R&D 분포와 경제 위기의 영향, 그리고 위기로 인한 기업의 R&D 투자 비율의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 회계연도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당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판매량과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의 지표에는 위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R&D의 경우 위기의 영향이 늦게 미쳐 스코어보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008년과 비교해 전 세계 R&D 투자의 증가 속도는 낮아졌지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0개의 스코어보드 기업들은 R&D 투자를 2008년 하반기 6.9%까지 증가시켰다(2006년 10%, 2007년 9%).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특히 EU의 R&D 증가율은 8.1%로 미국(5.7%), 일본(4.4%)보다 높다. 이는 미국보다 2년 연속 높은 수치이며, 일본보다는 4년 연속 높은 수치이다. 또한 EU 기업들의 R&D 증가율은 3년 연속 명목 GDP 증가율

을 초과하였다.

EU 내에서는 국가별로 R&D 증가율이 상이하다. 전통적으로 R&D 투자자가 많은 독일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R&D 투자를 8.9%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이탈리아(20.4%), 스웨덴(17%), 덴마크(16.4%), 영국(11.3%) 등의 기업들은 EU 평균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1.6), 프랑스(0.7%), 벨기에(-0.8%)의 기업들은 R&D 투자 수준이 매우 낮다.

이번 스코어보드의 상위 50위 R&D 투자기업들을 살펴보면, EU와 미국은 각각 16, 18개의 기업들이(양국 모두 지난해보다 2개 낮은 수치), 일본의 경우 13개의 기업들이(지난해보다 4개 많은 수치)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위 R&D 기업들을 살펴보면, 도요타(76.1억 유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64.8억 유로), GM(57.6억 유로), 화이자(57.2억 유로), 존슨 앤드 존슨(54.5억 유로), 포드 모터스(52.5억 유로)가 차지하고 있다. EU에서는 폭스바겐(59.3억 유로)이 가장 큰 R&D 투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아(53.2억 유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 나머지 두 기업은 스위스의 로세(58.8억 유로)와 노바티스(51.9억 유로)이다.

한편 전 세계 R&D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도국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R&D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은 40%, 인도는 27.3%,

대만은 25.1%를 기록하였다. 스위스와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 또한 스코어보드 평균 이상의 R&D 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 증가율은 낮지만 미국의 경우 R&D 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R&D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에서 개별 산업의 R&D 비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R&D 투자가 R&D 집약도<sup>1</sup>가 높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단지 3분의 1 정도만이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그 나머지의 절반가량이 중상위 R&D 집약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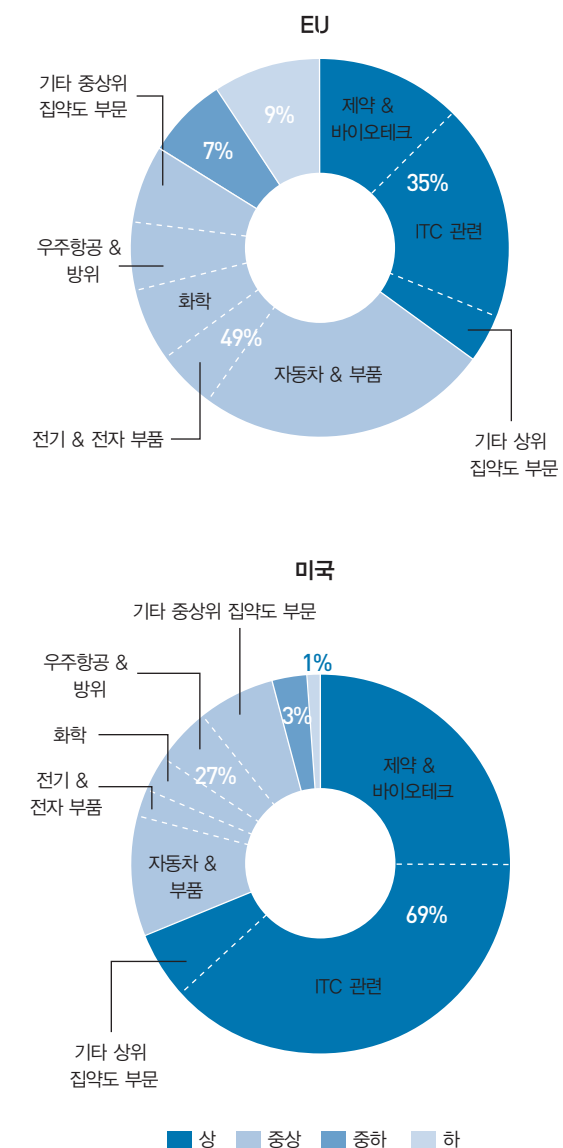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R&D 투자 집약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의 R&D 집약도는 큰 변화가 없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R&D 투자에 비해 순매출 상승률이 높아 R&D 집약도가 감소하였다.

EU 기업들의 총 R&D 집약도는 미국보다 다소 낮은 상태이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편차를 보인다. R&D 투자의 상위 15개 부문 중 11개 부문을 살펴보면, EU 기업들의 평균 R&D 집약도는 특정 부문에서 미국의 기업들보다 높다. 이러한 부문은 기술 하드웨어 및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 우주 및 방위, 전자 및 전기 부품 산업이다. 하지만 R&D 집약도가 높은 그룹의 비중이 작아 EU 기업들의 총 R&D 집약도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의 비중은 미국기업(69%)들이 EU 기업들(35%)보다 더 높다.

한편 가장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이다. 스코어보드 기업들을 살펴보면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문은 전체 R&D 투자에서 18.9%를 차지한다. 제약 기업들의 높은 R&D 투자 증가율은 R&D가 제약산업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증명해준다. 유럽은 이 부문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지난 3년 동안 가장 빠른 R&D 증가율을 기록한 10개의 제약 기업들 중 4개가 EU에, 5개가 미국에, 1개가 일본에 위치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 또한 지난 수년간 가파른 R&D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환경 이슈와 에너지의

★ R&D 집약도에 따른 부문별 투자 비율(%) EU vs 미국



<sup>1</sup> R&D 집약도는 순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안정적 공급이 중요시되면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기업들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 부문에서 스코어보드에 올라 있는 6개 기업들의 성과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 기업은 모두 EU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부문의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R&D 증가율을 살펴보면 모두가 스코어보드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의 영향은 지역·부문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 2008년 원유 가격의 상승은 R&D 집약도가 낮은 석유 관련 기업의 순매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을 비교해보면, EU 기업들은 같은 그룹의 미국기업들에 비해 순매출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감소했는데, EU는 R&D 집약도가 중상위권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은 R&D 집약도가 중하위권인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의 미국기업들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Monitoring Industrial Research: The 200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제3회 국회 브뤼셀 포럼 The 3<sup>rd</sup> Brussels Forum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3<sup>rd</sup> Brussels Forum on the 19th of November. Dr. An Duk-Keu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ave a lecture on "Technology barriers and harmonisation of regulations after the adoption of the Korea-EU FTA." He highlighted that Korea's efforts to conclude FTAs with the US, India and the EU will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for its economy as a whole and also for individual companies by providing incentives to improve their production processes. He emphasised that Korean firms must actively devise future strategies regarding EU's safety- and environment-related technology regulations. Major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nd electronics, must be prepared so they are not disadvantaged by EU's non-tariff barriers once the FTA comes into effect.

지난 11월 19일 연세-SERI EU센터는 <한-EU FTA 체결과 시사점: 기술규제 관점의 평가>라는 주제로 제3회 국회 브뤼셀 포럼을 개최하였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추진된 미국, 인도, EU와의 FTA 협상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한-EU FTA 체결은 한국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경우 안전, 환경의 측면에서 유럽의 수준 높은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포럼의 회장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재 민주당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비에르 코젠티 EU 대표부 수석상무관과 오성근 KOTRA 통상정보본부장, 김흥종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제4회 EU Core Circle 세미나 개최 The 4<sup>th</sup> EU Core Circle Seminar

SERI held its 4<sup>th</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on the 25th of November. A presentation was given by Director Kim Eun-Joong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o played a major role in concluding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He believes that this agreement will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that they will become important strategic partners for each other. This is especially valuable because the EU is expected to become an even more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now that the Lisbon Treaty has been adopted.

지난 11월 25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리스본조약 이후 EU의 변화>라는 주제로 EU Core Circle Society의 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타결의 주역인 외교통상부 유럽국의 김은중 국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김 국장은 리스본조약 발효로 국제 위상이 강화될 EU와 맺은 기본협력협정이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리스본조약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